

에너지·자원정책의 과제와 방향

- 상공자원부 -

I. 세계에너지 수급여건

-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지구상에 가장 뚜렷한 존재가 되었음.
- 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인류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풍요로와져 왔으나, 불을 만들어내는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, 이의 지나친 사용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.
- 우리는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고, 생활환경을 가급적 덜 해치는 에너지원의 개발과 이용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것임.

가. 세계에너지 수급여건

(1) 화석연료(석유, 석탄, LNG)의 유한성

- 현재까지 확인된 가체매장량을 기준할때 석유는 43년,

LNG는 59년, 석탄은 24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석유, LNG는 21세기 중반에 거의 소진될 전망이다.

(2) 에너지자원의 지역적 편재

- 석유는 중동에 66.1%(OPEC에 76.9%)가 부존되어 있고,
- 석탄의 경우도 석유만큼 지역적 편재가 심하지는 않으나 구소련, 미국, 중국 등 3개국에 57% 이상이 집중되어 있음.
- 따라서 세계에너지시장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안고있음.

나. 세계에너지 수급구조

-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전후하여 46~47%까지 높아졌으나, '80년대 이후 OECD등 선진국들의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석유비중이 40%이하로 감소하고 있음

세계에너지원별 소비 구성비 추이

(단위 : %)

	1973	1979	1985	1990
석 유	47.3	46.1	39.3	38.6
석 탄	28.2	26.7	28.4	27.3
원 자 력	0.8	2.3	4.8	5.7
수 력	5.6	6.2	7.1	6.7
천 연 가 스	18.1	18.6	20.3	21.7
계	100	100	100	100
(총소비량 : 백만TOE)	(5,915)	(6,809)	(7,193)	(8,033)

며,
- 석유 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·천연가스의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임.

다. 국제에너지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치

○ 전세계 인구의 16%를 차지하는 선진국(OECD 24개국)이 총에너지의 52.3%를 소비하고 있으며, 전세계 인구의 84%를 차지하는 非OECD 150여개국은 총에너지의 47.7%만을 소비, 선후진국간 극심한 소비격차를 보이고 있음.

○ 우리나라는 세계 총소비에너지의 1.3%를 소비(세계 제 11위)하고 있으며,
- 석유도입량은 전세계 도입량의 3.5%로 세계 제6위 수준임.
○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.
- 대략 일본의 1/2수준, 미국의 1/3수준으로,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1인당 에너지 소비량 비교('91)

	한 국	일 본	미 국	프 랑 스
1인당 GNP (\$)	6,498	27,299	22,501	21,188
에너지소비량 (TOE)	2.39	3.54	7.72	3.73

라. 장래의 전망

○ 현재 국제석유시장은 Gulf사태이후 미국의 강력한 정치·군사적 주도아래 중동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,
- 물량면에서도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17 \$/B선을 유지할 것임.
○ 그러나 궁극적인 석유부존의 유한성과 점진적인 OPEC의 국제석유 시장 점유율 확대로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확대가 석유수요를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한 고유가시대 재도래 예상

상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어 음.
- 총에너지사용량은 10년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여 왔고

	1970	1980	1992
총에너지사용량(백만TOE)	20	44	116

- 특히 '89년이후에는 저에너지가격 정책과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신증설에 따라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.

○ 에너지 소비구조도 석유·전력등 고급에너지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
- 국내유일의 부존 에너지자원인 무연탄 비중이 70년의 30%에서 '92년에는 5%로 급격히 감소하였음.
○ 에너지사용 부문별로 보면 70년대 후반까지는 가정·상업부문이 최대소비부문이었으나, 80년 이후에는 산업부문이 최대 소비부문이 되었음.
- 최근에는 자동차 보급확대로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

II.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

1.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

○ 1970년대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고, 소득수준의 향

	1986~1988	1990	1991
경제성장률 (%)	12.8	9.3	4.7
에너지소비증가율 (%)	10.2	14.1	12.3
에너지/ GNP 탄성치	0.80	1.52	2.62

에너지원별 구성비 추이

(단위 : %)

	1970	1980	1988	1992
석유비중	47.2	61.1	47.0	61.7
무연탄비중	29.4	22.5	16.5	5.2

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추이

(단위 : %)

	1975	1980	1988	1992
산업부문	38.5	44.1	46.3	53.8
수송부문	9.5	13.0	17.6	19.9
가정·상업부문	45.3	37.3	32.2	23.8
공공기타	6.7	5.6	3.9	2.5

가 급증

- 반면 에너지이용효율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선진국보다 효율이 낮으며
 - 특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많음

로 전환되고 있으며,

-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에 애로가 있음.
 - 수요급증에 대비한 공급시설의 건설에는 5-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,
 - 입지확보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
선진국과의 에너지이용효율 비교('91)

(단위 : TOE/천, \$, '85불변가격)

	한국	일본	미국	프랑스
GNP 1000 \$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	0.63 (100)	0.25 (40)	0.43 (68)	0.34 (54)

발전소 입지확보 및 소요재원 ('93~'97)

입 지	소요 27개소중 현재 15개소만 확보 (원자력 3개소 미확보)
재 원	총 28조 5천억원중 약 40%만 한전 자체조달 가능

- 이와같은 에너지소비의 양적팽창과 질적변화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에너지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.

2.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

가. 에너지소비의 급증

- 그동안 에너지의 수급에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배양되었으나,
-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국제수지에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.

나. 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와 공급능력 확충의 어려움

- 에너지수요구조가 석유·전력·가스등 고급에너지 위주

다. 국제 환경규제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수급 제약

- 최근 국내외적인 대기환경 규제 추세와 관련 석유·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제한이 불가피한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 강구 필요

라.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개입

-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취약해지고 그 결과 에너지산업의 정부의존이 관행화 되어있음.
- 물가안정 및 산업지원을 위한 에너지 저가격 유지로 소비절약 유도가 곤란한 현실임.

3.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방향

-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하여

	1970	1980	1985	1988	1992
에너지의 해외의존도 (%)	47.5	73.5	76.2	83.2	93.7
에너지수입액 (백만 \$)	136	6,575	6,575	5,516	14,329
(석유수입액)	(133)	(6,048)	(5,395)	(3,770)	(11,993)

* '92에너지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17.7%임.

	1988	1991	1992	연평균증가율(%)
총에너지소비 (백만TOE)	75.4	103.4	115.6	11.3
제조업원단위 (TOE/백만원)	0.65	0.81	0.91	8.8
에너지수입액/ 총수입 (%)	12.0	15.1	17.7	-

- 우선 기존의 에너지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보완·조정하고,
 -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 나아가며,
 - 본원적인 소비절약을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고,
 - 에너지산업의 시장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.
- 가. 에너지 수급계획의 보완·조정

○ 에너지수급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정책을 지금까지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수요관리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1997년까지 에너지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,

-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며,
-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하는 것임.

- (1)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의 추진
- 에너지가격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고, 에너지관련 세제(특별소비세, 관세등) 및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격 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이 유도되도록 하고,
 - 에너지 이용효율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지원 및 규제시책 병행하고,
 - 에너지 수요증가 요인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수요관리에 전환하도록 하겠음.

- (2)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추진
- 현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낮으나 국내 화석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아('92: 82.3%), '90년대 후반에는 「'90년 EC평균」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
 -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「'90 EC 수준동결」로 설정될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(1993~1995)하도록 하겠음.
 - 아울러 청정연료 및 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등 에너지공급구조도 보완·조정하겠음.

- (3) 에너지 공급시설의 최적화 및 고도화
- 예비율의 적정수준 유지로 발전설비를 최적화하고 석유 수요의 경질화, 저공해화에 따른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유도하도록 하며,
 - 자금 및 입지확보를 위한 대책 강구로 에너지공급 설비

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.

- (4) 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의 조정
-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, 환경요인등을 고려, 종합에너지 수급계획과 각 에너지원별 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조정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음.
- 나.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

- 에너지사용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에너지저소비형구조로 개편하여
 - 산업부문의 에너지/GNP탄성치를 개선, 1992. 3. 23에서 1997년 0.85로 줄이고 에너지 공급자에게 수요관리 시행의무를 제도화하며,
- 민간과 지방의 참여와 창의를 활용하여 절약효과의 보급을 극대화할 것임.

- (1) 에너지저소비형 제조업구조로의 개편
- 전자·정보·기계등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저소비업종의 발전을 촉진하고,
 - 에너지다소비업체 및 시설에 대한 절약시책을 강화하여
 - 194개 다소비업종의 「절약 5개년계획」 실천을 통해 원단위를 10% 절감하도록 하고,
 - 에너지다소비시설의 신·증설시 현행 「에너지사용계 획신고제도」를 대규모 공공시설과 같이 「협의제도」를 강화하겠음.
 - 이와함께 에너지소비가 적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료 진단의 확대와 에너지관리자 채용의무 완화등 지원위주로 절약을 유도하겠음.

- (2)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의 구축
-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도로·항만·역 등 수송기반 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·시공하도록 하겠음.
 - 승용차 연비를 1997년까지 5% 향상하고, 경소형차 보급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여 승용차의 제조·판매·사용 단계별로 소비절약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.

- (3) 건물·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
- 건물과 주택의 설계·시공·사용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절약 시책이 추진되도록 에너지절약형 건물설계기준을 추가제정하고 건물에너지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음.

- (4) 에너지공급부분 소비절약 강화
- 에너지공급자(한전 등)가 에너지공급시설 투자액의 일

정부문을 에너지 수요관리에 투자하는 「수요관리투자계획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겠음.

- 특히 소비절약의 파급효과가 큰 전기절약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
 - 고효율기기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및 구입자금융자로 전기냉방 대체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,
- 효율이 높고 대기환경개선에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
 - 주거지역 지역난방의 경우 1992년 214천호에서 1997년 1,119천호로
 -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1992년기준 8개공단에서 1997년 20개 공단으로 보급을 늘여나가겠음.

(5) 에너지절약시책의 효과적 전개

-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준비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,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 민간에너지 소비절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「지역에너지계획」의 수립을 지원하여 민간과 지방의 참여와 창의를 통한 절약추진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음.

다.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

-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점은 「소비절약기술」과 『화석에너지 대체기술』을 대상으로 함.
- 에너지기술은 공익성이 크므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되, 산·학·연이 합동으로 개발해 나가겠음.

(1) 에너지 기술개발

- 에너지절약 기술은
 - 수요기술을 바탕으로 10개분야 25개 중점과제에 역점을 두어
 - 재정·석유사업기금·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의 R&D 자금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음.
 - 산업체의 공공 애로기술로서 단기간내 실용화가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은 민간주도로 개발하고, 민간기업만으로는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술 및 대형복합기술은 정부주도로 개발해 나가겠음.
 - 특히 전력, 가스기술등은 관련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임.
- 화석에너지 대체기술은
 - 태양열, 태양광, 연료전지, 풍력 등 10개 분야의 기술

개발을 중점 추진하여 신·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음.

- 차세대 원자로, 수소에너지, 에너지저장기술 등은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등 미래에너지 기술개발비전을 제시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음.
- 탈황, 탈진,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은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연계 추진하고,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을 개발해 나가겠음.

(2) 개발된 기술의 국내 실용화 지원

- 개발된 기술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신기술제품의 정부우선구매제도 및 장려금지급제도를 확대하며,
- 개발기술의 실용화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대상을 신·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모든 에너지기술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음.

(3) 지원체제 강화

- 대학내 에너지연구센터의 설립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, 연구개발능력 제고를 위해 고급기술인력의 국내외 재교육·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등 에너지 연구인력 양성지원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음.
- 국내외의 「에너지기술데이터베이스」를 구축하고 IEA, APEC, 쌍무 및 다자간 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음.
- 최근 설립된 「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」의 기능을 강화하여
 - 에너지·자원기술 및 연구개발의 종합조정과 평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정부,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대규모 에너지공급자의 R&D 자금의 출연 및 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음.

라.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

- 에너지가격의 자유화 폭을 최대한 넓히고 시기를 앞당기며,
- 에너지산업의 독과점 완화 및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음.

(1) 석유·가스가격 관리제도의 개선

- '94년중 국내유가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는 유가연동제를 시행하고, 경쟁여건이 정밀되는대로 완전자

유화로 이행해 나가며,

- 유가가 자유화되면 정유회사에 대한 이윤규제도 철폐
토록 하겠음.

○ 이와함께 유종간 가격이 국제가격 구조로 접근되도록,
휘발유/ 경유간 및 LPG/ LNG간의 가격격차를 축소하겠
음.

○ 도시가스 가격조정은 1994년중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
단체로 완전 이양토록 하겠음.

(2) 전기요금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

○ 최대수요가 감축되도록 계절별,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
강화하고,

○ 전체 전기요금중 기본요금비중을 상향조정하는등 요금
체계를 합리화 하겠음.

(3) 석탄가격은 점진적으로 자율화

○ 무연탄가격은 고시대상을 현재 9단계에서 점차적으로
축소해 나가고 연탄의 판매소이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
가 자율결정 하도록 하겠음.

(4) 에너지산업에의 신규인입 규제 완화

○ 유가 자유화시책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
시책과 연계하여 정유산업에의 신규참여를 점진적으로
허용하겠음.

○ 석유수출입 제한도 완화하여 가격자유화 단계별로 수출
입을 허용하되(현재 5개 유종은 자유화), 일정 수준의
비축의무를 부과 하도록 하겠음.

○ 이와 함께 석유유통부문에 있어서도 경쟁체제가 구축되
도록

- 주유소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, 상표표시제
의 조기정착으로 소비자가격의 경쟁이 시현되도록 하
는등 유통단계의 기능 재정립 및 공정거래질서가 확립
되도록 하겠음.

○ 천연가스(LNG) 공급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신중히 검토
하도록 하고,

○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한국중공
업의 경영 정상화대책과 연계하여 발전설비제조 및 설치
공사에 경쟁체제를 도입 하겠음.

Ⅲ. 부문별 시책의 추진

○ 이상의 기본정책방향에 따라 석유, 석탄등 에너지원별
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음.

1. 석유

○ 우선 석유수요증가에 따라 안정공급 기반시설을 지속적
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.

- 산유국과의 경제·자원협력관계를 증진하고, 중국·
CIS산 원유도입 증대등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
진하여 석유의 안정적 확보노력을 지속하고,

- 석유소비증가 및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석유정
제시설을 확충하고, 1997년까지 국제수준으로 정제시
설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음.

· 정제시설 능력(천B/D) : ('92) 1,675 → ('97) 2,010

·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 비율(%) : ('92) 5.6 → ('97)
20.3

- 원활한 석유수송과 교통체증 완화등을 위해 정유공장
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유관을 확장 건설
(1,076km)하고, 송유관 건설에 따라 석유류 수송체제
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음.

- 수도권·공단등 대규모 석유소비지 인근에 적정규모
의 저유시설을 확충하고, 공업단지 조성계획등을 수립
시 미리 저유시설부지가 반영되도록 하겠음.

○ 국제 석유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유기대응능력을 보다
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음.

- 국내 석유비축량을 IEA 권고수준인 90일분으로 확대
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비축 60일분을 확보
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7개기지 신증설외에 추가 기
지건설을 추진하고,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가겠음.

※ '92년말 기준 4개기지에 40백만B(28일분) 비축중
- 이와 병행하여 민간비축도 30일분을 목표로 단계적으
로 확대 추진 하겠음.

○ 국내의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저공해 연료유 공급의
확대가 필요하다고 봄.

저유황유 공급계획

	유 황 함 량	공 급 시 기
경 유	1.0% → 0.4% → 0.2% → 0.1%	- '93년부터 0.2% 공급 - '96년부터 0.1% 공급개시
B-C 유	4.0% → 1.6% → 1.0%	'93부터 일부지역에 0.1% 공급

- '1993.1부터 휘발유는 전량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만 공급중이고,
- 연료용 유류도 유험합량을 대폭 낮추어 공급토록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
 - 저유황유 공급촉진을 위해 저유황유와 고유황유간의 가격차이를 확대하고,
 - 정유시설 등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을 지속하겠음.

2. 가스

- 천연가스의 공급안정기반을 구축하여 청정·편리연료의 보급확대에 대응하겠음.
 - 현재 수도권에만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전국배관망 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
 - 1997년에는 영·호남 주요도시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음.
 - 현재 인도네시아 위주의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, 현재의 단순도입형태를 탈피하여 국내기업의 현지 가스개발참여를 통한 안정공급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
-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내 가스수요의 적정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.
 - 우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요가 평준화 되도록 가스냉방 시스템의 보급확대와 요금제도 개선등의 방법으로 계절별 수요관리방안을 강구하고,
 - 가스수요급증과 발전용 LNG 공급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계획과 연계,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보완하겠음.
- 천연가스사업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입단계와 국내공급단계에서 민간참여 허용을 검토하겠음.
- 이와 함께 LPG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기지도 확충하여 평택과 여천에 1992년 현재 429천톤 수준의 수입기지를 1997년까지 851천톤으로 늘려가겠음.

3. 전력

- 발전사업의 경쟁촉진과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력의 안정공급기반을 다져 나아가겠음.

- 우선 '97년까지 27기의 1,200Kw의 신규발전소 준공('92 : 24,120 → '97 : 36,160천Kw) 하고

	원자력	유연탄	LNG	수력	계
기수	3	12	7	5	27
용량(천Kw)	2,700	6,120	2,950	723	12,493

- 발전설비건설을 위한 신규입지확보를 위하여
 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증대 및 육영사업 위주로 지원사업을 전환해 나가고,
 - 신도시 및 대규모 공단조성시 발전소입지도 동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음.
- 발전사업의 경쟁촉진과 발전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입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자발전 허용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음.
 - 아울러 현행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전력사업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.
- 전력요금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여
 - 고율의 요금이 적용되는 하계 및 주간시간대를 단축하고 주간·저녁·심야시간대 간의 요금차등제를 확대하는 등 계절별·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강화하고,
 - 전기요금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요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용, 농사용등 원가 이하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음.

4. 석탄

- 이미 경제성을 상실한 비경제 탄광을 과감하게 폐광하여 국민경제부담을 줄이고,
 - 1993년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던 비경제 탄광 폐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영이 어려운 대탄광(석공합백·은성광업소 등)의 조기폐광도 유도하도록 하겠음.
 - 1993~1997 폐광물량 : 7,500~9,000천톤
- 기계화·갱도굴진등 생산보조 지원의 차등화와 정부부축, 광업자금융자시 우대조치등 각종 정부지원체계를 장

	제 1 단계	제 2 단계	제 3 단계
계획기간	1988~1991	1992~1996	1997~2001
개발목표	연구기반구축	실용화기반구축	기술자립달성
공급목표 (%)	0.4	1.0	3.0

- 기 가행가능탄광 중심으로 개선하겠음.
- 비경제 탄광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 경제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.
 - 1993~1997년간, 강원도 주요탄광지역 4개 시, 군 (태백, 정선, 영월, 삼척)을 대상으로 하여
 - 시가지 도로정비와 국도확장등 기반시설 확충과 광공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립등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
 - 탄광진흥지역을 국도건설종합계획상의 「특정개발지역」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음.
- 1994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동결되어온 탄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적정수준에서 정부지원을 지속하겠음.

5. 신·재생에너지

- 국내 기술자립을 통해 2001년까지 총에너지 수요의 3%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태양열, 태양광, 바이오, 폐기물, 석탄이용 기술, 연료전지, 풍력, 수소, 해양에너지, 지열등 10개 분야를 단계별로 개발 추진하겠음.
- 실용화의 중점과제는 자동차연료용 알콜, 연료전지, 도시쓰레기 소각로, 태양광발전,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등에 두고,
 -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와 산·학·연 연구체제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되
 - 기업주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시 상용화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실용화·상용화에 중점을 두겠음.
- 총에너지중 신·재생에너지 비중을 제고('92 : 0.48 → '97 : 1.3%)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, 실용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신·재생에너지 이용보급확대를 추진하겠음.

6. 국내외 자원개발

- 국내 광물자원의 생산체제의 현대화로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고, 국내생산 광물자원의 정체 및 활용기술개발로 제품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,
- 국내 대륙붕에서 경제성있는 규모의 유전개발을 위해 탐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
- 해외유전개발 대상지역을 북방권 국가등으로 확대(베트남, 중국, 러시아 등)하되,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

우리업체의 관련개발설비 수수활동을 지원하겠음.

-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적극 추진으로 개발수입을 확대, 공급의 안정을 기하겠음.
 - 주요자원에 대한 개발수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금·제도상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음.

주요광종의 '97년 개발수입 목표

유연탄	우란	동광	연·아연
18%	18%	12%	12%

- 유망광산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조사를 강화하고, 특히 대수요처 컨소시엄의 개발참여를 유도하겠음.
- 이와함께 주요자원보유국인 중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등 자원의외교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음.
- 태평양 심해저 C-C해저(1,000천km)에 대한 집중탐사활동으로 유망구역(300천km)를 확보하고, 1994년중 광구등록을 추진하는등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.

IV. 맺는말

- 이번 신정부의 작고 강력한 정부를 위한 조치로 동력자원부와 상공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발족됨으로써 에너지와 산업이 보다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상호보완·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봄.
- 본인은 에너지의 문제가 곧 국민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, 에너지 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활일을 다해 나가겠음.
 - 그리고 이러한 시책은 미흡하나마 이번에 마련한 에너지자원부문 신경계계획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있음.
- 본인은 부처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에너지·자원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겠으며,
 - 에너지관계자 여러분도 정부의 신경계계획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. ☘